

이형일 부총리, 첫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부총리 취임 이후 외청·공공기관 주요 참석자들과 첫 상견례
- 국민 체감 성과 창출과 주요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1.(목)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9.22.) 이후 첫 재정경제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기관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재정경제부와 유관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재정경제부 유관기관 간담회 >

- 일시/장소 : '26.10.1.(목) 16: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재정경제부) 부총리(주재), 차관보, 혁신성장실장, 국고실장,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 등
 - (외청) 국세청 차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 (공공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유관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국민과 현장에 둘 것을 당부하였다. 공급자 시각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이 제도 이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실행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불필요한 보고와 대책은 줄이고, 핵심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관별 특성에 맞게 AI를 업무 전반에 접목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가안정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탈세 대응과 할당관세 악용 방지,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AI·첨단산업과 방산·원전 분야의 수출금융 지원 및 수출기업 애로해소, 대미 투자사업 추진,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 부총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충실히 설명하는 한편, 합리적인 지적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경찬 (044-215-2510)
		담당자	사무관	권혁률 (bamryul@korea.kr)

